

## 5.

### 외교·안보



[강의 보기]

# 1

## 국민의힘 당헌·당규 속 외교·안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서는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지향해야 할 길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본정책 <10대 약속>

#### 10.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 10-2 (북한의 비핵화와 외교지평의 확대)

한반도 및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고 외교지평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능력 있고 믿음직한 중추 국가로 재도약한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동북아 질서 구축을 선도해 나가며 '인간 안보' 및 기후변화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 대처를 위해 글로벌 스마트 외교를 전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경제외교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며, 이에 맞추어 800만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국민의힘은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경제안보,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지향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2 한미관계

## 1 한미동맹의 역사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자국 병력의 한국전 참전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동시에, UN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하여 UN 회원국 16개국의 파병을 이끌어냈습니다. (※ 물자지원국-39개국, 의료지원국-5개국)

한미 양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성립 후 같은 해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한국 대외 관계의 근간이자 유일한 동맹인 한미 동맹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거쳤고, 역동적 발전에 따라 한미관계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더 성숙한 동맹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70여년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번영의 중요한 축으로서 기능해왔고, 21세기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미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오랜 우정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원숙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2 한미동맹의 현황

70년 전부터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균열과 불협화음이 발생했고, 급기야 동맹의 위기, 동맹의 와해라는 평가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내 전쟁 억제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군사 훈련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는 한미동맹의 근간과도 같습니다. 주한미군 역시 “평시에 계속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며 준비태세(Readiness)를 강조하는데, 이는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훈련이 2019년부터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훈련들마저 야외 실기동 훈련(FTX)이 아니라, 3년 연속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3년 넘도록 실기동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대비태세 역량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4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협상 공백 상태가 계속되면서 주한미군 철수설까지 제기되었고, 2020년 52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는 기존에 반영되었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 문구가 삭제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주한 미국대사는 1년 넘도록 공석인 상황**이며, 이는 과거 어떤 정권보다도 가장 길었습니다.  
(※ 이명박정부-약 2개월, 박근혜정부-약 5개월)

미국은 2022년 2월이 되어서야 차기 주한대사를 지명했는데, 결국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뽑힌 뒤에야 정식으로 부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과 중국의 대사 인선을 일찌감치 발표한 것과 달리, 주한 미국대사직이 역대 가장 오랫동안 비워진 상황을 두고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밀려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 3 한미동맹이 가야 할 길

국민의힘은 20대 대통령선거 공약을 통해 ‘한미동맹의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명시하였습니다.

**약화된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하고 북핵에 대한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동맹 자체의 필요와 판단에 따른 연합훈련 실시로 북핵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확장억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동맹 간 신뢰 회복으로 우리의 국익과 글로벌 역할 확대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신기술, 글로벌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력 등 뉴프론티어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북한 일변도의 정책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안에 갇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역내 관련국들과의 적극적이고 열린 협력을 지향**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접근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 3

## 한중관계

### 1 한중관계의 역사

체제 대립과 6·25 전쟁으로 한중은 소원한 관계로 이어져 오다가 1988년 7월 대한민국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한중 수교의 본격적인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1992년 8월, 한중 간 정식 국교가 수립되었고 이후 한중 간 교류가 경제, 문화, 사회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중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 달러에서 2020년 2,450억 달러로 약 38배나 증가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전체 교역량의 24.6%)이자 최대 수출·수입국이 되었습니다.

한중 관계는 1998년 ‘협력동반자 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거쳐 2008년부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 2 한중관계의 현황

2021년 9월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중국에 지내는 비호감도는 ▲2019년 51.5% ▲2020년 59.4% ▲2021년 73.8%로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 자료출처 : EAI(동아시아연구원) 여론조사)

중국에 대한 비호감 원인으로는 ‘사드 보복 등 강압적 행동’(65.2%)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은 2020년 35.3%에서 2021년 43.8%로 크게 올랐습니다. 중국을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가’로 인식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44.3%에서 61.8%로 큰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자국의 전략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대했고, 나아가 한국에 대한 경제·문화적 보복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한한령(限韓令) ▲한국 단체관광 금지 ▲비자발급 거부 ▲통관 불허 ▲중국 내 한국기업 영업정지 ▲게임산업 판호 발급 중단 등 유무형의 사드보복 조치로 인해 한국이 입은 피해는 약 13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손실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한편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3국 간의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라며 3불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3불과 ‘사드의 단계적 처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 합의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주권적 결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삼는 중국의 태도가 국내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고구려사 왜곡 ▲한복·김치를 중국 전통 문화로 소개하는 등 문화, 역사를 포함한 문화 공정(工程)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한중 갈등의 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사드, 역사, 문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부적절한 행동만큼이나 국내 반중 감정에 악영향을 끼친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저자세 외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부당한 발언과 행동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국격은 물론 국민들의 자존심까지 낮췄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3 한중관계가 가야 할 길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대중 외교를 구현해야 합니다. 한중 정상간 교환 방문 실현과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중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해야 합니다.

또한 한중 간 기존 협력기제의 충실한 이행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북핵문제를 포함한 현안과 잠재적 갈등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장 및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 외교장관 연례 교환 방문, 외교차관 전략대화 연 2회 개최, 외교·국방 2+2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한중 고위급 핫라인을 운영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4 한일관계

## 1 한일관계의 역사

대한민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제에 의해 식민통치를 당했습니다. 폭압적인 식민지정책에 맞서 국내에서는 항일독립운동이 이어졌고, 한국의 독립운동과 연합군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인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 후, 1965년 이뤄진 국교 정상화에도 양국은 경직된 관계를 이어오다가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 김대중-오부치 선언: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채택한 합의문으로, 당시 양국 정상은 과거사 인식을 포함해 11개 항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이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됐습니다.

## 2 한일관계의 현황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입었던 상처를 비롯해 주권, 과거사 문제들은 오늘날까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신일본제철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021년 6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서 각하되었습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갈등**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9년 8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선언**했는데, 안보 공조 약화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결국 종료 방침을 보류하였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에 대한 충분한 조치 없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행동 역시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매우 강경한 대일 외교정책 기조를 내세워 왔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언행과 별개로 문재인 정부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거나 이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라는 우려가 높아지자 문재인 정부는 양국 주요 사안에 대해 임기 초와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으나, 일본의 뚜렷한 변화없이 기조를 바꾼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에 원칙과 기준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3 한일관계가 가야 할 길

첫째,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 즉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한일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고위급 협의채널 가동으로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넷째, 과거사·주권 문제는 당당한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미래세대 중심으로 양국 시민 간 열린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 5 경제안보

### 1 경제안보 개념의 부상

미중 경쟁 및 코로나 대유행 속에 자국중심주의가 국제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공급망·무역·투자·첨단기술 등 경제 분야에 있어 자국의 외교·안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수립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1년 중국 내 석탄이 부족해지자 중국 정부가 요소 등 석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의 생산과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요소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에서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국내 특정 상품의 공급을 한 국가에 과중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 공급망 체계의 취약성이 노출되었고, 이후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2 해외 대응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일본은 2020년 이래 정부 핵심 정책 목표로 ‘경제안전보장’을 강조해왔습니다.

정부 주도로 경제안보일괄추진법(가칭)을 추진하고 경제안보장관 직책을 신설하면서 경제안보 전략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정부 주도 하에 사이버 및 신기술 조직 신설을 통해 체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혁신경쟁법안에는 경제안보 현안을 전담하는 기술파트너십 부서 신설 지시를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미국과 경제·안보 2+2 회의체를 구축하는 등 국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과 고위급 전략대화, 외교장관 회의,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활용해 전략물자 수급 협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쿼드(Quad)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본격 참여하여 한-쿼드(Quad) 네트워크 구축 발판으로 활용해 국가 정상 간 ‘경제전략대화’를 활성화해야 하고, 주요 경제 파트너와 교역, 투자 및 인프라 사업 진출 촉진 및 고위급 전담 특사제도를 운용해야 합니다.

경제안보 위기에 여러 정부조직들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 6 재외동포

## 1 재외동포의 정의 및 현황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의미하고, 재외동포는 외국 거주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까지 포함합니다. 재외동포 수는 현재 기준 약 730만 명입니다. (2021년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기준)

재외국민 권익향상과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및 기대가 상승하면서 관련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정부기구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2. 현행 정책의 한계

해외출국자가 2011년 1,200만 명에 도달한 후, 2019년에는 약 2,800만 명으로 133% 가까이 증가하면서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도 약 191%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귀국지원, 방역물품지원, 응급의료지원 등 기존과 다른 유형의 재외국민보호 수요가 발생한 반면,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안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 3.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첫째,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하여 재외국민 권익 보호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을 설립해야 합니다. 둘째, 세계한상대회 및 세계한인무역협회 네트워크, 해외 우수 동포기업과 연계해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 인력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재외동포 권익신장 위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즉,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과 재외동포의 한국어, 국사, 문화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분야·세대별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첨단 미래산업 분야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및 투자 지원 및 관련 제도 정비, 해외 입양 동포 모국과의 유대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연습문제

※ 자세한 풀이과정은 국민의힘 「공직자 역량강화」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중 한미 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은?

가	한국과 미국은 2021년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	한미 양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성립 후 같은 해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여러 동맹국 중 한 국가로, 현재 한미연합사에 있는 전시 작전권은 특정 시한이 지나면 한국에게 전환될 것이다.
라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왔고, 최근 안보 분야를 넘어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다.

①가 ②나 ③다 ④라

2. 다음 중 한중 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상승하게 됐다.
나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 결정에 있어서 중국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	중국은 2021년 기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수입국이다.
라	문재인 정부 시기 양국의 정상은 서로 한국과 중국을 서로 한 번씩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①가 ②나 ③다 ④라

3. 다음 중 한일 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는 일제강점기 한국 국민의 고통에 대한 일본 측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담겼다.
나	문재인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현재 지소미아 협정은 종료된 상태이다.
다	일본이 과거사·주권 문제를 완전하게 사과하기 전까지 한국은 일본과 어떤 교류와 소통 노력도 해서는 안된다.
라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새로 임명한 주일 한국대사를 통해 일본 외무상 및 총리와 회담하는 등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가 ②나 ③다 ④라

4. 다음 중 경제안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	경제와 안보는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 외교·안보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	대한민국은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Quad)의 공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	중국을 통해 요소를 가장 저렴하고 가까운 곳에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수입 비중을 늘릴 필요가 없다.
라	국민의힘은 20대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미국과 경제·안보 2+2 회의체를 구축하는 등 국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①가 ②나 ③다 ④라

5. 다음 중 재외동포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	재외동포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다.
나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전담해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선거 중 대통령 선거에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라	국민의힘은 20대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약속했다.

①가 ②나 ③다 ④라

6. 다음 중 국민의힘 강령 속 외교·안보 관련 내용이 아닌 것은?

가	북핵 문제의 중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대한 실현한다.
나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
다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동북아 질서 구축을 선도해 나가며 '인간 안보' 및 기후변화·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 대처를 위해 글로벌 스마트 외교를 전개한다.
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경제외교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며, 이에 맞추어 800만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①가 ②나 ③다 ④라

<정답>

1. ③ 2. ③ 3. ① 4. ④ 5. ④ 6. ①